

[사회]

시국·공안 집회 광주 집중

5·18 기념행사 퇴색 우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식을 전후해 노동자·대학생·농민 단체의 대규모 집회 등이 광주에서 예정돼 있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광우병 민심'이 들끓고 있어 자칫 5·18 기념행사가 시국·공안과 관련된 갈등의 장(場)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광주역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행사에는 2천여명의 전국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노총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자제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치인·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면담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민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담은 피켓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은 18일 조선대에서 전국 대학대의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식이 휴일과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많은 대학생·노동자 순례단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인 18일을 앞두고 1만여명이 가까운 전국 노동자·대학생·농민 등이 광주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연상장 운하 반대 등의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 5·18 기념식을 전후해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이 분출될 것으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장에 들어서려다 대학생과 진보단체의 기습시위에 막혀 행사차질을 빚고 경찰 지휘관 일부가 경질되는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국산 수입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개최되는 5·18 행사가 분출구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면서 "5월 행사가 사회적 현안에 맞물려 치뤄지지 않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윤광장 신임 이사장 취임식에서 발생한 5·18단체들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행사 준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교과서' 탄생...내년 수업 활용

초·중·고교 교실에서 사용될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가 탄생했다.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사)인정교과서 집필작업이 마무리돼 곧 광주시교육청에 승인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6년 광주·전남도교육청,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5·18청소년교육협의회'를 구성, 현직 교사를 선정해 초·중등 교과서 집필작업을 해왔다.

지금까지 부교재용 5·18 관련



5·18 민주화운동

도서들은 종종 있었으나 인정교과서는 없었다. 이번에 출간된 중등용 '5·18 민주화운동'이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는다. 내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74쪽 울컥러라 책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를 채택했으며 '생각해봅시다' 등 코너를 통해 생각의 지평을 넓히도록 했다.

한편, 초등용 5·18 인정교과서는 삽화와 편집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



'티베트에 평화' 광주·전남지역 진보단체로 구성된 '티베트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중국대사관 광주영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티베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직량기자 jrwi@

'지역교육청, 지원센터 전환' 반대 잇따라

정부와 여당이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날 전국교육기관공무원 노동

조합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4월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왔던 본래 기능을 왜곡하고 있고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점차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근무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전남대 총장 후보 4명 등록

이들 후보는 오는 20일까지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21일 본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선거는 교수와 직원 모두 참여하되 직원 득표수는 교수 숫자의 10% 비율로 반영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9일 방송 토론회 등 4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 검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기 총장 임기는 오는 8월 17일부터 4년간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May 9th (5월 9일) showing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onnam, along with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여수산단 정전 원인 찾아라"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활동...한전도 특별점검

정부 합동조사단은 8일 최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기연구원 오대규 전문위원을 단장으로 지식경제부 관계자 2명과 학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두 9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우선 사고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 광주전력관리처 순천변전소와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정전사고 당시 폭발한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 내에 설치된 낙뢰충격 보호기(피뢰기) 2대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밀 조사

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 단장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밝혀내겠다"며 "사고원인은 다음주께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도 이날부터 이들 동안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전력설비를 특별점검키로 했다. 한전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용량 수전(受電) 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전력설비 특별진단을 실시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특별진단을 통해 대용량 수전 업체 고객들에게 전력설비 운영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상시 특별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현장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박만규기자 ykpark@

Advertisement for 'Kwag-nae-yeong' (곽내영) education, featuring a large title and contact information: 529-0090, starting July 4th.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rge title and contact information: 02-3144-0775-8.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gjeonghoosu' (청정호수) residential complex, showing a scenic view of a lake and buildings.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rge title and contact information: 02-3144-0775-8.